

공정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시대공감형 관혼상제 문화 확산 필요

—관혼상제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의지 높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시대에 적합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 국무총리실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1대 과제」의 하나로 ‘시대공감형 관혼상제 문화 확산’을 선정하고, 여성가족부에 실용적인 정책추진방안 모색을 요청함.
-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 생활체감정책단¹⁾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남성 413명, 여성 587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관혼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2차에 걸쳐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제8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1.6.10)에 「21세기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 주요 일간지 및 방송에서는 생활체감정책단 조사결과를 중요한 기사로 보도하여 관혼상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
-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정책단의 조사결과

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로 향후 생활체감정책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임.

I. 관혼상제 문화,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공감형으로 개선 필요

☑ 국무총리실은 관혼상제 개선을 「건강한 사회 만들기 11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해 옴.

- 그 동안 관혼상제에 관한 정부정책은 과소비 방지와 미풍양속의 순화·유지를 위해 「규제강화→규제완화→규제탈피」 방향으로 진행하여 대부분 관혼상제의 외형적 비용절감 절차 간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졌음.
- 또한 전통 관혼상제 형식 및 절차의 단축 및 편의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정책효과가 국민속으로 내재화되지 못한 채, 체면과 과시욕, 부담스런 경조관행, 지도층의 호화 결혼 및 장례식 등 폐단이 지속되어옴.

1) 생활체감정책단은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대표적 생활공감형 정책 사업임. 2011년 상반기에는 나눔문화 확산, 관혼상제 개선 방안, 우리사의 차별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실천 정도를 알아보았음.

☞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통과의례(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인 관혼상제가 야기하는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성·세대·계층 등 사회관계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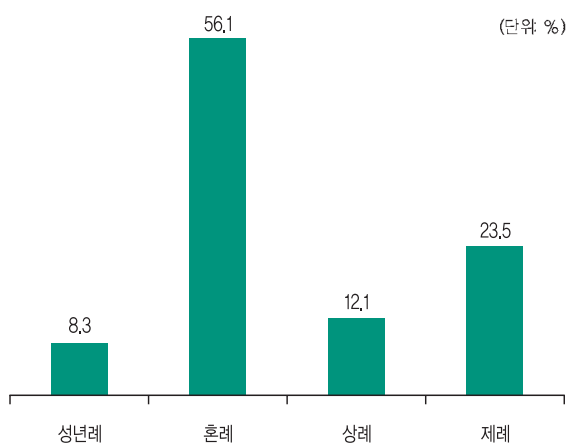
☞ 이에 변화하는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관혼상제 문화를 확산하되, 공공부문의 술선수범과 지속적인 정책수행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문화를 일상생활에 정착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함.

II. 관혼상제 전반에 대한 평가

이슈 #1

남녀 56.1%, 관혼상제 중 ‘혼례’ 문화에 대한 개선요구 가장 높아

☞ 전체 응답자 중 73.2%가 현재 관혼상제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함. 특히 ‘혼례’에 대한 개선요구가 56.1%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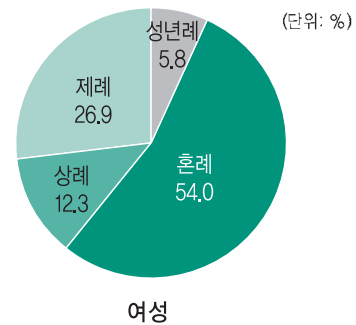


[그림 1] 개선이 필요한 관혼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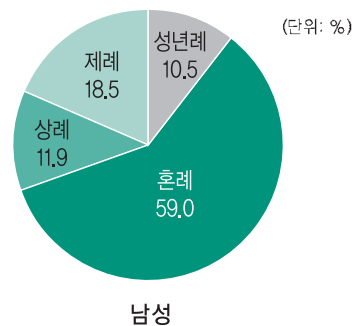
- 현재 관혼상제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90.7%는 관혼상제의 ‘과시적인 부분’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남성은 31.5%가 관혼상제 문화를 ‘전통문화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해 여성(23.5%)보다 관혼상제를 전통과 연결시키는 경향을 보임.

- 남녀 모두 관혼상제 중 ‘혼례’에 대한 개선요구가 가장 높음. 특히 여성(26.9%)은 남성(18.5%)에 비해 ‘제례’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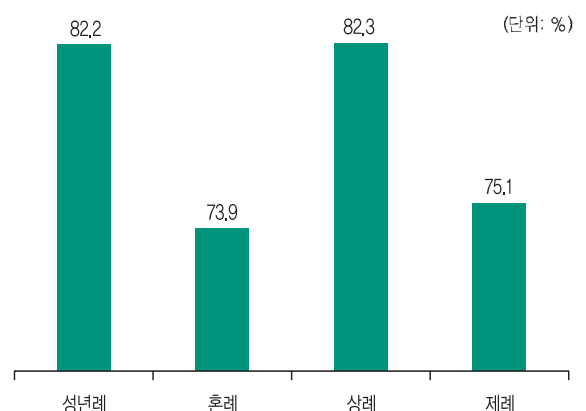
여성



남성

[그림 2] 성별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관혼상제

- 전체 응답자의 82.3%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관혼상제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실용적인 지침서 마련이 요청됨.



[그림 3] 관혼상제 지침서 필요성 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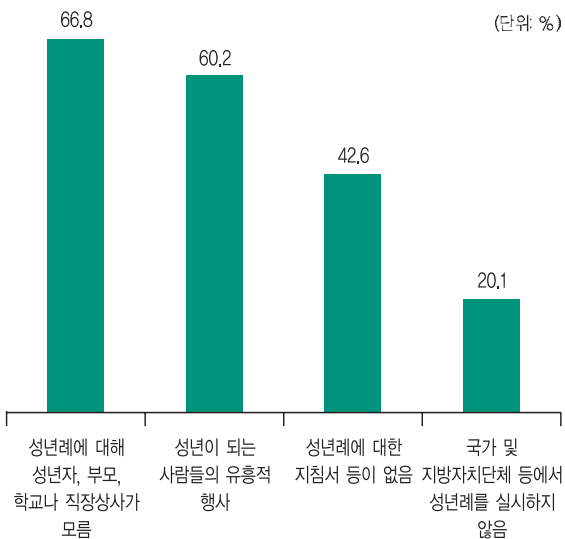
Ⅲ. 분야별 관혼상제에 대한 의견

이슈 #2

성년례를 통한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기대, 남성(23.8%)이 여성(13.2%)에 비해 높아

☞ 성년례는 인지도가 낮고, 성년이 되는 사람들끼리의 유흥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

- 성년례의 문제는 인지도가 낮는데서모른다는 응답이 27.1%) 비롯된다는 의견이 높음 '성년례에 대하여 성년 자녀 부모, 학교나 직장상사가 모르는 것'을 성년례의 문제로 지적한 응답이 전체의 66.8%임. 또한 '성년이 되는 사람들의 유흥 행사'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도 60.2%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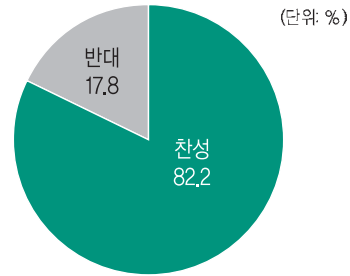


[그림 4] 성년례의 주요 문제점(중복응답)

- 우리나라 성년례는 일부 지자체, 대학 등 기관·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 의식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집단 성년례의 경우 전통관례 재현에만 치중하다보니 수요자인 청소년에게 성년례의 의미와 가치 전달이 미흡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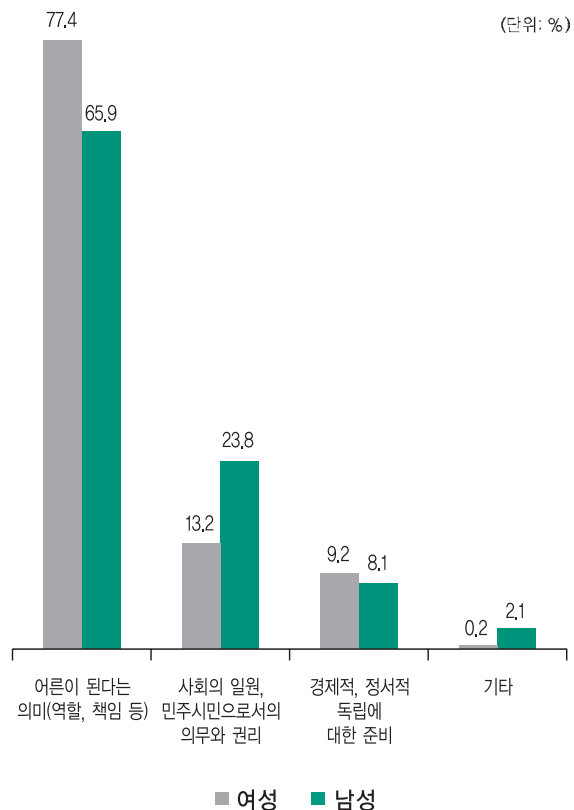
☞ 건전한 성년례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지침서 보급에 대한 찬성 비율(82.2%)이 높음.

- 건전한 성년례 문화 정착을 위해 지침서 보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2%가 찬성함



[그림 5] 성년례 지침서 보급 찬·반 비율

- 여성(77.4%)은 남성(65.9%)에 비해 '어른이 된다는 의미(역할, 책임 등)'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반면 요구함. 남성(23.8%)은 여성(13.2%)에 비해 '사회의 일원,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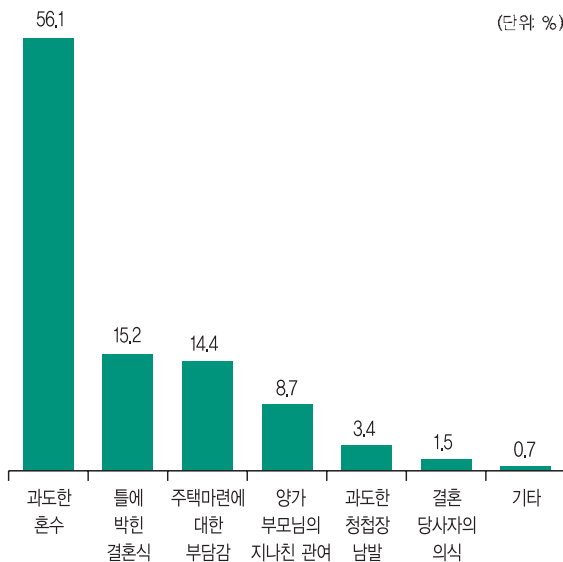
[그림 6] 성별에 따른 성년례 교육 요구 현황

이슈 #3

‘형편에 맞는 혼수준비 문화 정책(62.5%)’,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 혼례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3.5%이고, ‘과다한 혼수’가 혼례문화의 주요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56.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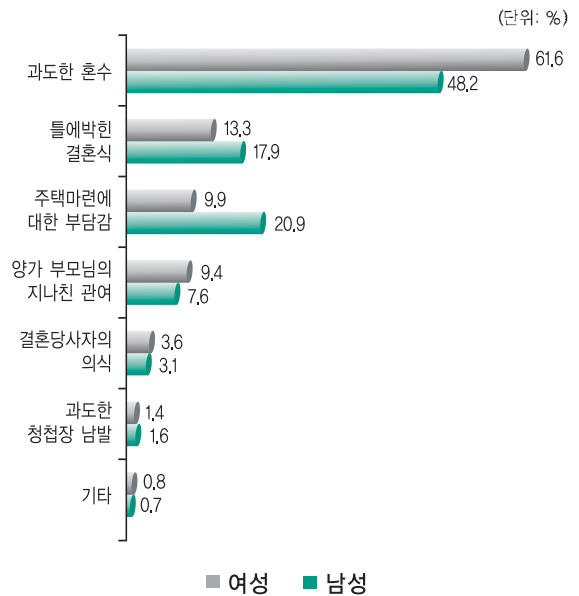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83.5%가 혼례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기혼자(89.9%)는 미혼자(74.1%)보다 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
- 혼례문화의 주요 문제점으로 ‘과다한 혼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56.1%로 가장 높았으며, ‘틀에 박힌 결혼식(15.2%)’,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혼례문화의 주요 문제점

- 여성(61.6%)은 남성(48.2%)보다 ‘과다한 혼수’가 혼례문화의 문제라고 더 많이 인식하고, 남성(20.9%)은 여성(9.9%)보다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감’을 문제로 많이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남성은 집, 여성은 혼수준비라는 관행적 인식이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신혼주택구입에 6,465만원, 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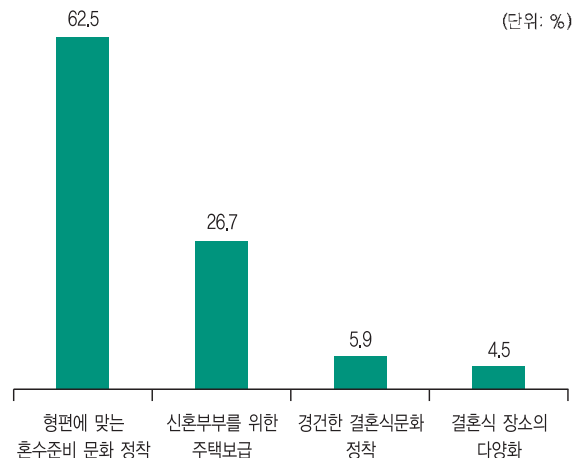
512만원을 지불하는 반면 주택을 제외한 혼수 장만을 위해 남성은 1,613만원, 여성은 2,424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8] 성별에 따른 혼례문화의 주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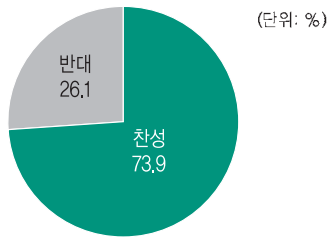
☞ 혼례문화 개선방안으로 ‘형편에 맞는 혼수준비 문화 정책(62.5%)’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형편에 맞는 혼수준비 문화 정책’을 우선 과제로 응답한 비율은 62.5%로 가장 높았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보급(26.7%)’, ‘경건한 결혼식문화 정책(5.9%)’ 순으로 응답함. 한편 선호하는 혼례 형태로 ‘가족, 친지 중심의 간소한 결혼식’을 응답한 비율이 56.4%로 조사됨.



[그림 9] 혼례문화의 개선 과제

-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서 보급에 대해 73.9%의 응답자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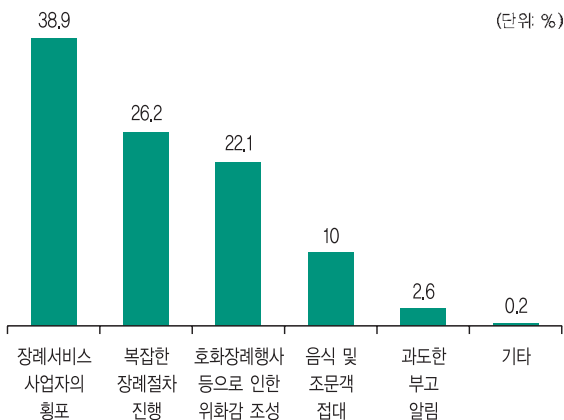
[그림 10] 혼례 지침서 보급 찬·반 비율

이슈 #4

장례비용에 대한 개선요구(43.8%)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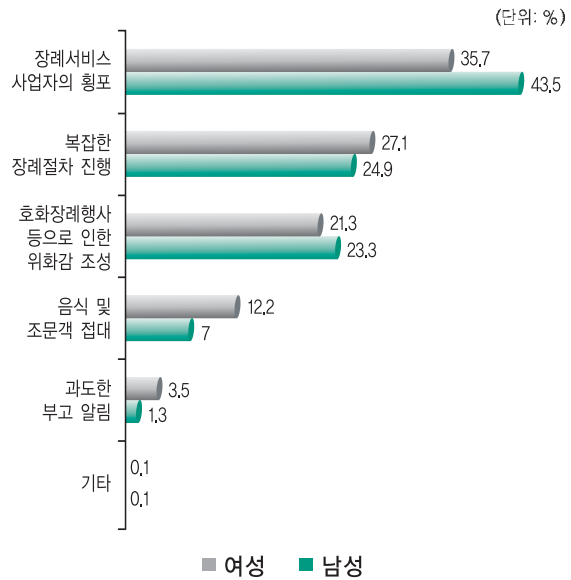
- 50대 이상 응답자(76.3%)는 장례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큼. 여성(12.2%)은 남성(7.0%)보다 '음식 및 조문객 접대'가 장례문화의 문제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전체 응답자의 61.6%가 장례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장례문화에의 참여경험이 높고,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76.3%)에서 장례문화의 문제를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임.
- 장례문화의 주요 문제점으로 '장례서비스 사업자의 횡포'라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복잡한 장례절차 진행(26.2%)', '호화장례행사 등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22.1%)'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11] 장례문화의 주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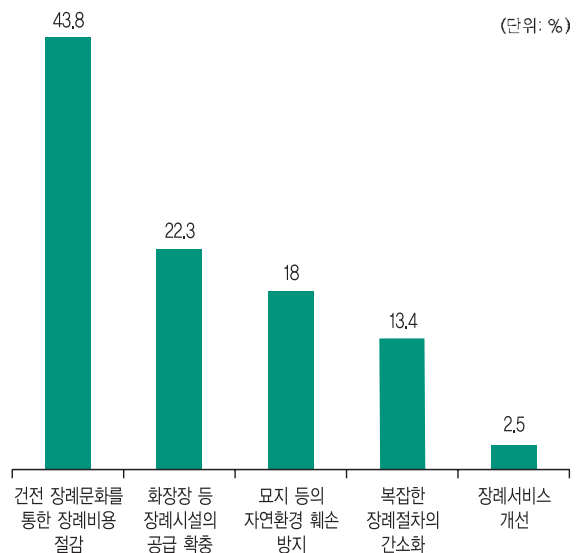
- 여성(12.2%)은 '음식 및 조문객 접대'를 남성(7.0%)보다 장례문화의 문제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그림 12] 성별에 따른 장례문화의 주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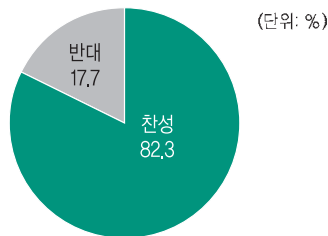
- 상례문화 개선을 위해 '장례비용 절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43.8%로 가장 높음.

- 전체 응답자의 43.8%는 상례문화 개선을 위해 '건전 장례문화를 통한 장례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화장장 등 장례시설의 공급 확충(22.3%)', '묘지 등의 자연환경 훼손 방지(18.0%)'의 순으로 개선을 요구함.



[그림 13] 장례문화의 개선 과제

-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서 보급에 전체 응답자의 82.3%가 찬성할 특히 이들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서비스 비용에 관한 사항(42.2%)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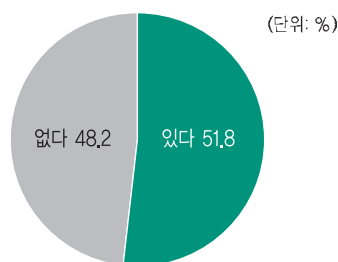
[그림 14] 상례 지침서 보급 찬·반 비율

이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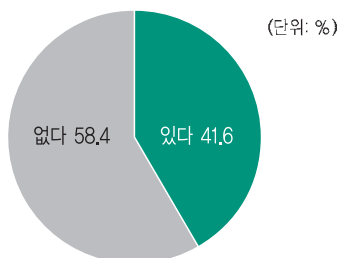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것(63.8%)'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아

- ☞ 제사문제로 가족갈등을 경험한 여성은 51.8%로 남성 41.6%보다 많음.

- 제사문제로 가족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임. 여성(51.8%)은 남성(41.6%)보다 제사로 인한 가족갈등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함.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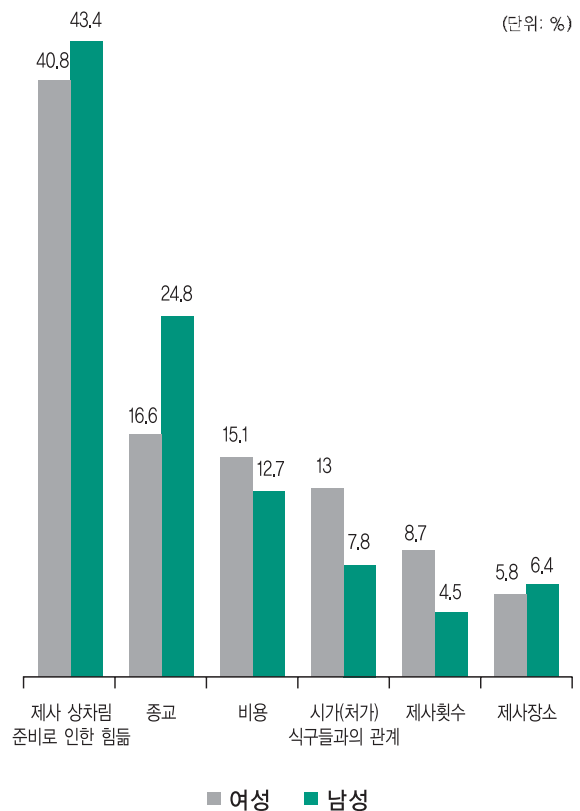


남성

[그림 15] 성별에 따른 제사문제로 인한 가족갈등 경험 여부

- 가족갈등의 주요 대상자는 형제자매간(59.3%)이 가장 높으며,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사 상차림 준비로 인한 힘듦(41.8%)', '종교문제(19.2%)', '비용문제(14.2%)' 등의 순으로 지적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제사 횟수 문제(여성 8.7%, 남성 4.5%)'와 '시가(처가) 식구들과의 관계(여성 13.0%, 남성 7.8%)'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 여성 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주로 일하는 사람이 여성(어머니, 딸, 며느리 등)인 경우는 62.6%인데 반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는 경우는 4.9%에 불과한 또한 명절에 남편 쪽 가족과 함께 보내는 가구는 62%, 남편 쪽 가족과 보낸 후 부인 쪽 가족으로 이동하는 가구가 34.6%, 부인 쪽 가족과 함께 보내는 가구는 2.1%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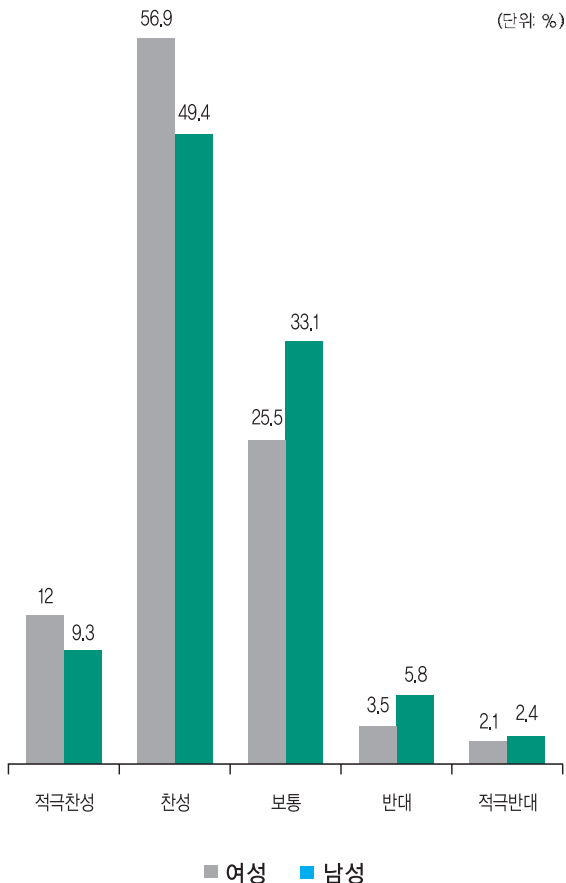
[그림 16] 성별에 따른 가족갈등의 주요 원인

- ☞ 제사문화 개선을 위한 형제자매 비용공동부담에 대해 56.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남녀모두 가족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사문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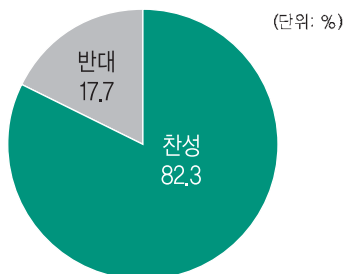
개선을 위해 형제자매 구별없이 비용공동부담 방안에 56.6%가 찬성의 입장을 보임.

- 딸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 (58.7%)보다 여성(68.9%)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그림 17] 성별에 따른 딸이 제사지내는 것에 대한 인식

- 건전한 제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서 보급에 전체 응답자의 75.7%가 찬성함.



[그림 18] 제례 지침서 보급 찬·반 비율

IV. 시대에 맞는 관혼상제 문화 확산 방안

◆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관혼상제 각 부문별 전문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 관련단체 관계자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T/F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21세기 생활 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을 제82차 국가정책조정회의(2011.6.10)에 보고하고, 실용적 관혼상제 개선방안을 설명함.

□ 1단계 :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 협의체'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관혼상제 교육 강화 및 정보 제공'

- 관혼상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운영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종교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실용적인 관혼상제 추진방향 설정, 세부 실천 국민운동 및 관혼상제 유관단체간 연계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관혼상제 교육·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관 및 단체 중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매년 5월 성년의 날을 계기로 양성 평등한 성년례 모형 개발 및 보급 등의 성년례 교육, 결혼준비 과정에서 감소한 결혼식 준비 등 체계적 결혼설계를 지원하는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 관혼상제 교육이 필요함.
- 당사자의 재정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 등을 포함한 관혼

상제 가이드 북 제작·보급이 필요함.

- (성년례) 성년례의 의미와 기능, 의식 및 절차, 성인의 권리 및 의무, 이성관 등
- (혼례) 혼수와 예단범위, 혼례절차, 결혼식장, 신혼여행, 혼례와 종교 등
- (장례) 임종준비, 장례절차, 조문예절, 조문객 접대, 종교별 절차 등
- (제례) 제사절차와 방법, 차례상, 명절음식 요리방법, 가족놀이 방법 등

📌 2단계 : '공공시설 예식장 활용 및 공공기관 교육 강화'와 '공직사회 건전한 경조문화 선도'를 통해 공공부분 솔선수범

-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적극 개방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혼인예식장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우수사례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여 확산을 유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자체 직장교육 시 시대에 적합한 관혼상제의 의미와 기능, 행사방법 등의 교육을 강화가 필요함.
-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예산으로 상이하게 집행되는 경조금품의 실태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명확한 경조금품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함.

📌 3단계 : '지속적인 의식개선 및 관련 연구추진' 과 '시대에 적합한 공감형 관혼상제 홍보 강화'를 통하여 관혼상제 개선방안 추진기반 조성

- 실현할 수 있는 공감형 관혼상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국민의 의식변화와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관혼상제 실태조사(안)'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조사결과는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정책적 우선순위 및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함. 더 나아가 방송매체와 협력을 통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 주제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을 선정·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지속적인 사회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추진기반 조성이 필요함.

